

알립니다

친환경 주택·건설·건축 한눈에

‘강원에코(ECO)홈페어2018’ 10월31일~11월2일

녹색성장의 중심인 강원도의 주택·건설·건축 트렌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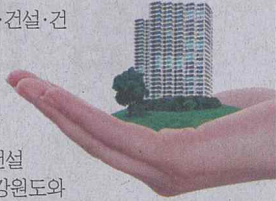
강원에코(ECO)홈페어2018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춘천

봄내체육관(구 캠프페이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강원일보사와 강원건설

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유일의 주

택·건설·건축 종합전시회로서 스카우 및 실내 인테리어 △친환경 태양열·태양광 시설 스카정용 소품 △건축자재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건설장비 및 공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가구, 조명, 실내 인테리어 시설, 건설·건축 자재 등을 제공해 도민들의 건강한 주거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 주택·건설·건축업체들의 소득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각 시·군의 홍보관이 마련돼 지역별 시책·문화·특산품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건설·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강원에코홈페어2018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10월31일~11월2일(수~금요일)

◇장소 : 춘천 근화동 봄내체육관 및 야외전시장(구 캠프페이지 일원)

◇업체 참가비 : 100만원(부스 비용)

◇참가신청 : 강원에코홈페어2018 운영사무국(070-5056-3692)

◇홈페이지 : <http://gwecohomefair.co.kr/>

■주최 : 강원일보사·강원건설단체연합회

■후원 : 강원도, 춘천시, 17개 시·군

올림픽 사후활용·동서고속철 등 33개 사업 873억 필요

내달 여야 입법·예산 심의 돌입
명품숲 등 신규 예산 17개 사업
동해안군 철책 철거 40억 증액

내달 1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여야의 입법·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국비 확보와 입법제 대비에 나선다.

올해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의는 한반도 평화 변영 시대 강원도의 중심역할 및

반점을 위한 각 현안이 산재, 도는 국회 예산 심의 및 입법 총력전에 돌입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 국비 확보 사업과 관련, 도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신규와 증액 반영, 사업 조기 추진 필요사업으로 분류, 총 33개 사업에 873억 3000만원 규모로 재설정했다. 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 5000억원 규모다.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17개 사업 455억 5000만원 규모다. 주요 현안은 올림픽 사후활용 및 레거시 사업 국비 확보 등이다. 올림픽 현안은 올림픽 기념관 및 테

마파크 조성 74억원을 비롯해 △경계장 시설 사후활용 28억원 △2021동계아시아 게임 남북공동개최 50억원 △가리왕산 생태복원사업 78억원이다. 주요 신규 사업은 강원도 대표 명품숲 조성(42억원) 등이 있다.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은 8개로 346억원이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약이 임박한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는 정부 예산안에 17억원이 반영됐으나 추가로 183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19억원이 가까스로 반영된 올림픽 1주년 기념식(Again평창·평

화)은 3억원이, 동해안군 경제철책 철거는 40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와 정부 공모가 필요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7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타 면제 필요 SOC사업은 동해선(강릉-제진)철도와 북측 원산, 평강을 잇는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남북SOC교통망이 대표적이다. 제천-영월고속도로는 예타선정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 가능하다.

정부 공모선정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등이 꼽힌다. 올림픽 시설의 국가 지원을 뒷받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와 산악관광 관련 조항이 제외된 채 통과된 규제프리존특별법 대체입법 마련도 과제로 남겨졌다. 도는 오는 28일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갖는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달 초 예정됐다. 박지은

“도로 인프라 공급 강원경제 영향력 적어”

국토연구원, 도 전역 낙후지역 분류
건설협 도회장 “도로 인프라 확충
도내 경제발전·인구유입 필수조건”

국책연구기관이 강원도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로 인프라 공급’보다 ‘인구유입책 선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내 열악한 강원도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에 따르면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을 측정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전역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됐다. 낙후지역의 경우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신규 기업 진입, 기존 기업 확장 등 외부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따라 수도권처럼 인구, 상업활동, 사회간접자본 밀도가 높아 도로혼잡양상을 보이는 지

역은 도로 인프라 제공이 경제발전에 효과를 보이지만 강원도의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강원도와 같은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소는 인구의 규모이다”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강원도의 경우 인구 유입이 선행되어야 지역내총생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관련 기업들은 도로 인프라와 인구 유입은 분리해 추진할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은 강원도와 수도권을 상대 비교한 결과로, 강원도 지형과 인구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원도는 도로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기업유치 등 경제효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로인프라 확충은 강원도 경제발전과 인구 유입의 필수요건이다”고 말했다.

임진석